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20.9.22)
- ②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개선 추진 ('20.9.23)
- ③ 국민권익위 주한외국기업인 만나 "기업 활동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 만들 것" ('20.10.7)
- ④ 국민권익위 주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연사로 참여 ('20.10.12)
- ⑤ 국민권익위 국민 어려움 덜어주는 적극행정 앞장서 ('20.10.21)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 이해충돌 문제 해소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적극 피력 -
- 국회 협의 통해 공청회 개최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위해 직권 조사권 확보 노력 전개 -

(2020. 9. 2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원 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8개) >

❶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파·기피	❸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❷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❹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❸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❺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❹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❺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

- 9월 23일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 회의' 개최, 우수 개선사례 공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

(2020. 9. 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규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규개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사규개선 우수사례로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공사의 사택매각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것을 부패행위로 인한 경우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했다.

또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약(위약)금을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등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 약 37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고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극행정도 부패'로 간주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주한외국기업인 만나 “기업 활동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 만들 것”

- 10월 7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2020. 10. 7, 국민권익위)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청렴하고 발전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국 기업인 대표들이 만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 코로나 여파로 고충이 많아진 기업인들의 건의·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손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로키 유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바바라 출먼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يدر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 활동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고충민원팀’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며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기업인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국제적 기업의 활동이 국내 기업들에게 청렴경영 우수사례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내외 선진 기업들이 청렴한 경영 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주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연사로 참여

- 12월 1일 특별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대담...청년·시민이 직접 선정한 질의로 소통 -

(2020. 10. 12, 국민권익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12월 1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에서 연사로 참여한다.

또 사전 질문 공모를 통해 우수 공모 참가자인 ‘청년 패널단’을 구성하고 특별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전현희 위원장의 강연을 진행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전 세계 약 2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으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개최된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특별세션 1부 연사로 참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되는 여러 사회의 불공정 부분을 진단하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한다.

또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 아렌트 학회 회장인 김선욱 교수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대담자로 참여해 한국 사회적 관점을 비롯한 세계적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담론을 마이클 샌델 교수와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사회의 공정·정의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청년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특별세션 사전 질문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한다. 질문주제는 ‘정의, 샌델 교수에게 묻다’, ‘청렴, 권익위원장에게 묻다’이며, 추첨을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책을 증정할 예정이다.

우수 공모 참가자는 ‘청년 패널단’으로 구성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청년 패널단이 선정한 질문을 실제 논의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여와 질문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반부패회의 누리집(www.iacc2020.kr)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은 세계 최고의 석학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대해 숙의(熟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 어려움 덜어주는 적극행정 앞장서

-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경작민 70년 숙원민원 해결 등 우수사례
차관회의서 소개 -

(2020. 10.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1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시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첫째,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민원 해결 사례다.

정부는 6.25 때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역으로 정책이주를 실시하면서 일정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했지만 무주지의 일부만 국유화되고 남은 필지는 무주지로 남겨졌다. 이로 인해 경작권 불법 매매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소관 불분명,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 등의 이유로 70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 간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설득하는 등 조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특별조치법 등의 제·개정과 해안면 개발 지원 등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거주민들은 약속했던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낙후된 해안면의 실질적 개발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둘째, 농·축·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청탁 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 사례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와 이례적인 태풍·집중호우 피해발생 등으로 농·임·축·수산업계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누리집과 연계해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개발을 도운 사례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지역의 문제를 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임에도 지역별 정책 개발과의 연계성은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제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기된 민원 약 1,500만 건의 분석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누리집과 연계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정책의제 중심의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네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의 관리·이전 문제를 조정 해결한 사례다.

여주휴게소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근처에 물류창고, 흡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됐으며 주변 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10년간 지속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갈등조정 및 합동 현장조사 등 기관 간 의견 조정을 거쳐 접근성 높은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참전기념비를 이전했다.

국민권익위 이건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날 차관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적극행정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